

# ‘최순실 쓰나미’에 동력 잃은 개헌론

대통령 연설문 외부 유출  
與 비박계 “진상규명 먼저”  
문재인 “개헌 논의 종료”  
박지원 “대통령 탈당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려 동력을 잃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통령 연설문 외부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거듭 비판하며 “청와대 주도 개헌에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 논의 참여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당분간 개헌특위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일단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헌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적극적 논의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야권의 개헌에 대한 기류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데에는 두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나란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미애 “차정부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사과 방송을 지켜본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국기 문란을 넘어선 국정 붕괴”라고 규정했으며, 안 전 대표도 “오늘로써 대통령발(發) 개헌논의는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개헌파 의원들도 “국기 문란 사태를 맞아 같은 야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선(先) 최순실, 후(後) 개헌’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도 개헌 논의의 불씨가 꺼질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새누리당은 이날 최순실 의혹과는 별개로 개헌 논

의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자 역할을 하고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이 우선이며 개헌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도 최씨 파동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어 개헌드라이브를 걸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최순실 게이트로 개헌 논의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찬성과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되고 예산국회 종료 등 적절한 시점이 오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에는 헌법개정안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JP 회동 ‘관심 집중’

개헌 논의 구체화·충청권 지지기반 확대 촉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25일 만찬 회동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권 일각에서 김 전 총리와 각별한 사이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안 전 대표의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내각제 개헌론자인 JP와의 회동에 눈길이 가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로 이뤄진 만찬 회동은 대선 구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자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만찬이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만찬은 김 전 총리가 지난 8월 인사차 자택으로 찾아온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제안해 이뤄졌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위태로운 상

황이고 나라도 어수선한 만큼, 국민을 편안하게 헤쳐갈 수 있는 해안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 측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놓고 얘기를 나누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후원회장이자 2012년 대선과정부터 함께 해온 최상용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고리로 JP를 종종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이 안 전 대표의 지지 기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개헌을 두고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도 관심거리다.

김 전 총리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호남권과 충청권의 연대 여부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선관위, 국민의당 리베이트 TF 꾸러”

전 선관위 직원 증언…국민의당 “정부 표적수사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례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7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는 전 선관위 직원 최모씨가 증언 석에 앉았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소속인 최씨는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사 TF의 일원이었으며 올해 8월 사직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그가 TF에 배속된 것은 올해 5월1일이며 검찰 수사

가 한창이던 6월말 TF는 해산했다. 최씨는 박 의원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TF에서만 조사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관위 조사과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고 묻자 최씨는 “보통 공선법은 조사과, 정치자금법은 조사2과에서 담당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의 통령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국민의당을 표적으로 특별팀을 만들어 표적조사를 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세법전쟁’ 개막…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선전포고

예산 심사 방안 발표…누리예산 국가 부담·미르 예산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력형 비리로 문제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580억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143억원 등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19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서 확인한 관련 예산은 약 86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깎아쪼갠 법인세를 과세구간 5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25%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세입 대책이 없으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조찬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세율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8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조 8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9월도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1조원이 더 걸렸다”라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농해수위 FTA 피해 지원 법안 의결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에서 의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늘리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와 분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